

2002 대전 대선유권자연대 출범 기자회견

- 일 시 : 2002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씀
- 출범선언문 낭독
- 3대 청산과제·10대 개혁 요구 발표
- 활동계획발표
- 대통령선거보도 감시위원회 활동계획 발표
- 대학생 부재자 투표 호소

2002 대전 대선유권자연대

대표전화 : 042-256-8032 팩스 : 042-252-6976

출범선언문

새 천년이 시작된 지 2년, 그러나 구시대의 정치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2002년 대선을 30일 앞두고 있는 지금 정치권은 진흙탕 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정부패의 청산, 정치개혁, 지방분권 등은 말만 무성할 뿐 법규로 확실히 제도화 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일부 정치인들의 당리당략과 개인적 이익추구에 따른 이합집산의 결과로 시민사회의 각종 의제들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의 혼탁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더 이상 국민들은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정치개혁의 일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확신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라는 단어는 시민들에게 실망과 불신, 소중한 권리에 대한 상실감을 안겨 주었고, 감동이 없는 정치, 희망이 없는 정치는 국민의 무관심과 소외를 낳았다. 세기는 바뀌었을지언정 정치는 바뀌지 않은 채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갈등과 격차만을 더욱 벌여 놓고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시켜 놓았다.

2002 대통령선거는 새 천년 역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첫 단추이며,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실험의 장이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유권자들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정책과 비전의 제시보다는 천문학적 돈이 오고가는 금권선거는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유권자의 깨어 있는 의식, 힘의 결집만이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300여 시민단체들이 결집하여 2002 대선유권자 연대를 결성하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대전지역에서도 13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2002 대전대선 유권자연대」를 발족하고 낡은 정치청산,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유권자의 대장정에 동참하고자 한다.

「2002 대전대선유권자연대」는 대전시민들이 바라는 낡은 정치의 청산과 지방분권실현, 시민사회의 의제를 구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유권자운동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선거법 및 각종 정치개혁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부패척결의 실질적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유권자들의 냉혹한 심판만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새로운 정

치를 일구어낼 수 있다.

이제 지역의 유권자들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말 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존재로 위상을 분명히 하고, 능동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2002 대전대선유권자연대」는 각 후보의 정책검증에 주력하여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하며, 학연, 지연, 혈연보다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통해 유권자의 힘으로 국민의 의제를 모아내려 한다.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힘을 결집시키는 「2002 대전대선유권자연대」는 대전시민과 함께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 부정부패에 오염된 정치, 중앙권력집중의 낡은 정치를 바꾸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권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깨끗한 선거풍토와 올바른 정책 선거는 유권자의 참여와 감시, 비판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치가 혐오스러워 외면하면 할수록 정치는 더욱 혐오스러워지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왔다. 「2002 대전대선유권자연대」는 시대가 요구하는 깨어있는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를 바로 세우고 정치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려 한다. 수동적인 유권자를 넘어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직접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유권자가 되도록 추동해 나갈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만이 정치를 바꾸는 소중한 동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대전의 일백만 유권자는 「2002 대전대선유권자연대」와 함께 새로운 정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당당한 주인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호소한다.

2002. 11. 18

2002 대전 대선유권자연대

3대 청산 과제 10대 개혁 요구

10대 개혁과제는 대선유권자연대에 참여하는 300여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학계의 검토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개혁의 과제가 망라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각 후보진영의 정책을 평가하는 시민사회의 후보평가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선유권자연대는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평가, 이를 100만 유권자 위원회에 동참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공유하여, 이번 대선이 정책에 따라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정책선거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3대 청산과제

1. 국가보안법 개폐
2. 호주제 폐지
3. 부패 청산

10대 개혁 요구

1.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개발정책의 전환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0% 확대
2. 지방분권과 자치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소재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3.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평화협정 체결과 불평등한 SOFA개정과 남북간 합의사항(7.4남북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의 이행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4.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참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로 확대, 시민선거자유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납세자 소송법 제정

5. 경제개혁과 소득 재분배

재산소득자 과세강화,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편중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

6.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산업연수제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7. 사회복지 내실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 보육료제 도입, 무기여장애인 연금 등 저소득 소외계층 소득 보장

8.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실시와 정부책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9.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

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10. WTO 협상과정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

쌀 관세화 개방 반대, 문화분야 WTO 양허요청안 철회

2002 대선 유권자연대 조직구성

- 공동대표 : 김규복 김용우 김조년 민명수 이정순 조연상(상임)
- 공동운영위원장 : 김광식(상임) 김경희 이숙자
- 유권자 참여운동 위원회 위원장 : 김경희
- 낮은정치청산 국민운동위원회 위원장 : 이광진
- 대통령선거 언론보도감시위원장 : 우희창
- 집행위원장 : 김제선
- 사무국 : 박은경 박상우 양홍모 이세걸 임원정규

참여단체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대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화를 위한 대전충남교수협의회,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전국주부교실 대전지부, 흥사단 대전지부

2002 대선유권자연대 사업방향

1. 2002 대선, 낡은정치 청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 지금까지의 선거는 천문학적 선거자금과 지역감정 등 권력형 부패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왔으며 그 후유증으로 오히려 정치적 불안만을 가중시켰을 따름이다. 더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또다시 정쟁과 파당짓기에 골몰하며 국민을 도외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와 '정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국가의 장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 따라서 우리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낡은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하여 유권자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대전대선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2002대전대선유권자연대'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 '2002대전대선유권자연대'는 먼저 낡은정치, 낡은선거를 개혁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책선거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 2002대전대선유권자연대의 2대 운동

① 낡은정치청산 국민운동

▪ 돈선거 지역감정, 권력형비리 등 낡은정치의 유산을 이번 대선을 계기로 완전히 청산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함.

▪ 특히 부패청산의 문제는 모든 후보들이 앞다투어 집권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를 차기정부 수립이후로 그 과제로 미뤄서는 안되며, 대선 이전 정기국회 과정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 대선 이전 '반부패과제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후보가 진정한 '깨끗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임

▪ 유권자연대는 ▶반부패입법노력▶돈선거,지역감정조장등 낡은선거운동탈피▶선거자금공개등 '낡은정치청산을 위한 서약'을 모든 대선후보에게 요구하고 이의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② 유권자의 힘 '100만유권자참여운동'

▪ 지금까지 유권자는 돈과 지역감정에 휘둘리며 늘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 받아왔음. 100만유권자위원회는 이런 수동적인 유권자에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직접 만 들어가는 적극적인 유권자로 거듭나기 위한 유권자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평가하여 투표하겠다는 '깨어있는 유권자로서의 권리선언' 이며 실제로 선거를 개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유권자 연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0만명의 유권자를 하나로 묶어 100만 유권자위원회를 결성할 것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을 뽑기 위한 유권자의 평가기준과 정보를 제공할 것임

3. 2002대전대선유권자연대 사업계획

1) 낮은정치 청산을 위한 1백만 유권자 서명운동 전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유권자의 요구사항>

- ① 대선전 국회에서 반부패입법을 완료하고 집권후 부패청산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 ② 돈살포나 지역감정 조장 등 낮은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정책중심의 깨끗한 선거운동을 약속하겠습니다.
- ③ 선거자금 수입·지출의 모든 사항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1-1) 추진방안

- 1차 릴레이시국성명 발표 (참가단체 중심으로)
- 대전시민사회 13개단체 참여 가두서명운동
- 온라인 서명운동
- 낮은정치청산을위한 대전범시민대회 개최
- 모니터와 유권자행동
- '돈선거와 지역주의 추방 유권자행동' - 선거운동 모니터 발표

2) 100만 유권자 등록운동 및 투표참여 운동 전개

(1) 유권자등록운동 - '유권자 힘모으기 캠페인'

○ 취지

▪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10가지 약속'을 함께 선정하고 이를 가장 잘 실천할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약속한 유권자의 등록을 받음

○ 모집규모 및 방식

▪ 100만명을 목표로 추진 (100만표는 당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 15대 대선은 39만표 차이로 당락 결정)

▪ 거주지역 및 이메일주소 등 최소한의 등록요건만 갖추도록

▪ 대전시민사회단체 회원 및 온라인 홍보 및 참여이벤트를 통한 유권자 모집

(2) 유권자 참여운동 전개

▪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유권자 참여운동 전개

대통령선거보도 감시 위원회

1) 결성배경

선거는 참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민주화로 가는 필수과정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대표할 이들을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구현된다.

요즘 같은 복잡한 정치상황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선거국면에 있어 언론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아울러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로 부각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과정에 대해 감시하는 일이며 유권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제대로 보도하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일이다. 만약 언론이 이러한 소임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한다면 여론은 편향, 왜곡되기 쉬우며 권력은 일부 집단으로 몰리기 쉽다.

언론이 개혁되지 않고는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언론이 제대로 서지 않고는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전대선유권자연대는 2002대선보도감시위원회를 발족하여 언론의 대선관련보도들을 감시하려한다.

2) 구성과 운영

■ 2002대선보도감시위원회 구성

- 모니터팀 : 신문분과와 방송분과로 나눈다.(총 14명)

* 신문분과 -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청매일 담당

* 방송분과 - 대전KBS, 대전MBC, TJB 담당

- 사무국 : 민언련에서 담당하며 홍보와 교육을 책임짐

■ 향후 일정

- 11월 18일 : 대전충남선감연 발족 기자회견 (선거보도감시 기준 및 시민행동지침 발표)

- 11월 11일~12월 2일 : 언론학교 강좌

- 11월 18일~12월 19일 : 선거보도감시 모니터 실시(주1회 모니터보고서 발표)

- 12월 19일 이후 : 종합토론회 및 모니터보고서 발간

■ 홍보 방안

- 민언련 홈페이지 내에 대선보도감시위원회 모니터보고서를 게재함
-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언론관련 매체를 활용한다.
- 기타 시민단체 소식지 등을 활용한다.
- CBS 매체비평시간에 소개한다.
-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모니터 강좌 일정

- 1 한국 언론, 그 오욕의 역사 / 11월 11일 - 차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2 방송 제대로 알고 보자 / 11월 13일 - 이상현(대전MBC 보도국·노조위원장)
- 3 신문 제대로 알고 보자 / 11월 15일 - 손규성(한겨레신문 기자)
- 4 보도사진 어떻게 볼 것인가? / 11월 18일 - 한경희(전 중도일보 기자)
- 5 퍼블릭액세스와 지역영상운동의 가능성 / 11월 20일 - 송덕호(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 6 풀뿌리 언론과 언론개혁 / 11월 27일 -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7 왜 조선일보가 문제인가? / 11월 25일 - 오한홍(옥천신문 대표)
- 8 인터넷 언론, 그리고 대안언론 / 11월 22일 - 김용덕(피알한닷컴 편집장)
- 9 신문 모니터 어떻게 할 것인가 / 11월 29일 - 우희창(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 10 방송 모니터 어떻게 할 것인가 / 12월 2일 - 손병우(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3) 발족 선언문

12월에 시행될 이번 대통령선거는 최근의 복잡한 국내의 정세와 맞물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함께 모여 2002대선보도감시위원회를 발족한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을 이끌어내는 선거보도에 대한 감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요즘 들어 대선을 앞두고 일부 언론의 편파, 불공정 보도가 위협 수위에 이르고 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이러한 보도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뜻있는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대전충남지역 방송 3사 및 일간지의 선거보도를 모니터하고, 올바른 선거보도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보도감시에서 우리는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재삼 확인하고 지속적인 언론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2년 11월 18일

4) 선거보도감시 기준

이번 대선보도감시위원회는 언론의 개혁이 정치개혁을 이끈다는 전제아래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거보도 감시에 적극 나설 것이다.

첫째,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지역주의 보도를 집중 감시한다.

과거의 대선보도사례를 돌아볼 때 각 언론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판세분석, 지역감정 불기피론 등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을 옹호하며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려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이에 각 당과 특정 지역을 지나치게 관련시키며 지역주의를 고착화하는 보도 행태를 집중 감시한다.

둘째,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보도가 이루어지는지 집중 감시한다.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언론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음에도 그동안 우리 언론은 후보자들의 자질검증과 정책전달을 외면해 왔다. 따라서 각 후보자에 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에 따르는 바람직한 투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보도를 집중 감시한다.

혼탁·과열 분위기를 비판없이 나열하여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는 정치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선거참여 분위기를 차단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열망을 악용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인 선거양상을 보도하는데 급급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적극 비판할 것이다.

넷째, 선정적인 경마식 보도를 집중 감시한다.

지금까지 경마식 보도는 마치 선거보도의 공식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순위 중심의 보도에만 집착, 건전한 정책대결을 방해하는 경마식 보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관행이다. 따라서 선정적 전쟁용어를 남발해 가며 공정한 대결을 차단하는 경마식 보도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5) 선거보도감시 시민행동지침

■ 대선대선유권자는 아래와 같은 선거보도를 거부한다

1.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보도

-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여과 없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행위
- 특정지역과 특정 후보나 정당을 연관시켜 보도하는 행위

2. 불공정한 편파보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보도하는 행위

3.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보도

- 혼탁·과열분위기를 비판없이 나열하는 보도행위
- 검증없는 흑색선전과 후보비방 보도 행위

4. 선정적인 경마식 보도

- 정책 대결을 외면하고 순위에만 집착하는 보도 행위

5. 무책임한 양비양시론적 보도

-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 양비양론적 태도로 본질을 흐리는 보도행위

7. 시민사회단체의 개혁의지 왜곡 보도

- 시민단체의 공정선거감시 운동 및 정치참여 운동의 의미를 왜곡하는 보도행위
- 유권자들의 선거혁명 분위기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보도행위

■ 위와 같은 보도에 대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대처합시다.

- 해당언론사와 기자 앞으로 항의전화와 팩스, 이메일을 보낸다.
- 2002 대선보도감시위원회 사무국(전화 042-863-0668 / 전송 042-863-0669)으로 제보한다.
- 대전충남민언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나도모니터」란에 제보를 올려 참여한다.
- 대전유권자연대가 주최하는 항의시위에 적극 참여한다.
- 위의 7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낸 언론사에 대해 시청거부 혹은 구독거부 운동을 실시한다.

6) 선거보도준칙 채택 촉구서

2002대선보도감시위원회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언론사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거 보도준칙을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정치인의 발언은 비판하고 보도를 자제한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텃밭시비와 지역감정 유발 발언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정치인은 바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지역 유권자를 선동하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득표만을 위해 특정지역을 불모로 하거나, 부당하게 타 지역을 비난할 경우 언론은 이를 강력히 비판을 해야한다. 더 나아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형성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발언들은 아예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감정의 진원지는 정치인들이지만 전과 경로는 바로 언론이기에 언론에서 보도를 자제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2) 공정한 보도와 불편부당의 원칙을 지킨다.

선거기간 중 언론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동안 매우 지대했다. 따라서 언론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유권자들은 특정언론의 보도에 휘둘려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언론은 '불편부당'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의도적이거나 허구적으로 논쟁화 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공정성을 빌미로 지나치게 산술적 균형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지연, 혈연, 학연, 친소, 이해관계 등에 얽매어 특정후보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선거보도를 지양하고 이에 대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특히 여·야는 물론 군소정당 후보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3) 신상보도를 지양하고 정책 대결에 초점을 맞춘다.

선거가 정책대결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언론은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후보나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분석하며 나아가 이슈를 개발해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선거보도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한 선거보도는 이상적 형태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한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정책문제를 찾아내 중점적으로 이슈화함으로써 정치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4)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보도, 여과없는 선정적 보도를 자제한다.

혼탁 과열 분위기를 비판 없이 나열하거나 후보자의 선정적인 발언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다. 언론이 부정적인 선거분위기를 형성해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대학생부재자투표 호소

- 대학생 부재자 투표 신고 운동을 당부합니다!

얼마 전 '대학생 정치참여를 위한 대학언론인운동본부'에서 전국 대학생 2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5%에 이르는 대학생이 16대 대통령 선거일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대선 참여율 또한 지난 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유권자는 740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9%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30만명에 이르는 20대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때도 역시 20대 유권자의 투표율은 31.2%에 그쳐 평균투표율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는 6·13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자체분석을 통해, 20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선거의식 희박'이 투표율 저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대학생 투표율 저조의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정치무관심은 어디서 기인했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랜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인의 부정부패, 당리당략적 운영 등 정치에 대한 염증에서 기인한 바 크다. 현재 정치권은 오로지 '올해 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로 '이합집산', '신당창당' 등으로 민생법안 해결이나 국정정의 바른 운영은 멀리한 채 서로 헤게모니 잡기 싸움에 휘말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염증은 정치권에 어떠한 기대도 걸 수 없다는 무관심을 낳았다고 할 것입니다.

대학생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부재자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하루 일과를 대부분 학내에서 보내는 대학생들의 생활적 환경 등을 고려한 투표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97년 대선에서 전체 부재자 유권자중 67.5%인 54만명이 대학생이었는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겨우 3만 5천여명(6.5%)에 불과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학생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넘어 우리의 힘으로 구시대적인 정치풍토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투표행위를 동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서는 선거 관행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할 사무소 소재지에만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왔습니다. 해당 대학 내 대학생 유권자 중 부재자 신청자 수가 2천명이 넘을 경우, 해당 대학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내에서 공간과 인력을 지원 받고, 선거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를 실시하면 선거법상

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16대 대선은 새 세기 첫 해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행사이면서,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이 표출되는 공간입니다. 유권자가 갖는 한 표의 중요성은 세대를 막론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중 젊은층의 투표참여는 전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금권과 연고주의 등에 사로잡혀 있던 기존의 부정적인 선거풍토까지 바꿀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유권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인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해 선관위와 대학당국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소가 대학내에 설치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학생 유권자 여러분,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합시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의 설치를 촉구하고 요청 합시다. 그리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섭시다.

2002. 11. 18

2002 대전 대선유권자연대